

김 장 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21세기 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전 세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산업화의 진전으로 에너지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21세기 초에는 현재보다 약 2배 이상의 에너지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의 충당을 위하여 석탄, 석유의 사용량을 계속 늘리게 되면 화석연료자원의 고갈과 함께 온실가스로 인한 각종 기상이변 등 지구환경 변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새 천년을 맞아 풍요로운 미래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환경보전과 지속적 경제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환경 친화적이면서 경제성을 갖춘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부족한 인류의 에너지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정책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한다고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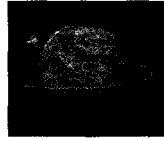
첫째, 에너지효율성 향상과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이 적극 전개되어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효성 있

게 추진하고 우리의 산업구조를 에너지절약형으로 전환하며, 특히 에너지 수요관리를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에너지절약에 관한 범국민운동을 펼쳐나감으로써 국가경쟁력 배양에 힘써야 한다.

둘째, 대체에너지의 개발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의 중·장기적 연구개발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성이 있는 청정에너지원의 확보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대체에너지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배려와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에너지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적이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의 이용을 확대하는 에너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기술이 상용화될 때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기술이 상용화될 때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하며, 원자력에 관한 투명한 정보공개로 국민의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원자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가야 하며, 원자력에 관한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의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넷째, 국제환경정책에 대한 공동의 대응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국제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정부를 비롯한 산·학·연 범에너지계와 환경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우리나라의 산업여건과 경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공동대응책을 마련하여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협약과 세계무역 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에너지안보의식의 확립과 국민이해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미래사회에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여부는 군사, 식량문제와 함께 국가안보문제와 함께 직결되는 핵심요소로서 에너지정책은 국가발전의 중요한 전략의 하나로서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에 범에너지계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다가올 21세기의 지구촌은 고도의 기술정보화 사회로 바뀌어 가면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어떠한 에너지원으로 인류의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룰 것인가가 에너지정책결정의 관건이 될 것이다.

바로 지금이 20세기를 살아온 우리 세대가 21세기를 살아갈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소중한 에너지자산이 무엇인지 신중히 고민해야 할 때인 것이다. 